임업장비 기계화시대 서둘러야

-장비구입에 정부지원을-

농산촌의 인력난이 극심화되어 문제가되고 있는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산림작업은 일반 농사일과는 또달라서 힘이 더 들뿐만 아니라 기술과 위험성이 뒤따르고 원거리에 출역하는등 불리한 조건때문에 고가의 임금과 특별 우대를 하지 않으면 출역을 기피하고 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작업종류에따라 고령자나 부녀자가 할수 없는 선택적이거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고충은 더한 것이다. 소득면에 있어서도 농업은 단기성 소득작물인데 비하여 산림은 소득이 막연하므로 영세산주가 고임금을 지불하면서 산림작업을 해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다.

우리가 60~70년대에 의욕적으로 많은 조림을 실시하여 오늘의 푸르름을 조성하여 놓았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경제림화의 기대는 바라볼수 없을것이다. 이제 연령적으로보아 덩굴치기, 솎음작업, 가지치기등 육림작업과 간벌등을 적절히 시행하여야될 임분이 대부분인데 일부 독림가나 기업림을 제외하고는 전혀 손을 못쓰고 있는 형편이므로 크나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일반 농사에서 씨앗을 파종후 적정한 솎음작업을 하지 않았을때의 경우와 하나도 다를바가 없는것이다.

이러한 필연적이고 당위론을 당국에서 모를이야 없겠지만 보다 적극적인 기계화나 약제에 의한 성력화(省力化) 시책이 따라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단기성 소득작물인 일반농업에서도 각종농기구 구입에 정부보조, 융자등 지원시책이 있는터에 산림장비 구입에는 아직 그런 시책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재정형편상 기계화에 앞서 기계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임도시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받아드리려함은 아니나 그렇다고 임도시설에만 집주하고 장비현대화에 소극적태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병행이 되었으면 한다.

인력난해소와 경제성제고를 위하여는 장비의 현대화가 필연적인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세한 산주들이 이들을 직접구입하여 사용하기에는 힘에 벅찬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장비구입에 있어서나 산림사업용 약제(지존작업, 하예작업용 약제등)를 구입함에 있어 정부의 보조나 장기저리의 융자등 대책이 있어주어야 할것이다. 우선 산림개발자금을 이용토록하되 조림이나 임도시설에 있어서와 같이 장기 연리 3%로하여 사용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이자율이 높아서 농산촌의 빚만 가중시키는 결과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고가의 대형장비는 사용빈도도 낮으려니와 개개인이 일일히 구입할 수가 없으므로 전문 임대업의 공사, 회사등이 설립되던가 우선은 1개도에 몇군데만이라도 산림조합이나 협업경영지도소등에 장비를 갖추어 놓도록하고 싼값에 임대사용케 하는 방법 등을 구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